**한번에 따라잡는 4차산업 디지털 융합의 이해 과제**

**이경민**

4차 산업혁명위원회(대통령 직속)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민간 서비스 전반에서 대한민국이 데이터를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구축된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기 위원회가 2021년 실행한 대한민국데이터119 프로젝트는 데이터 개방, 유통, 활용 촉진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한다. 해당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은 아래와 같다.

1. 전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과 시장 중심’
2. 국민 참여를 촉진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3. 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거버넌스 중심’

해당 프로젝트는 11대 실천 과제와 9대 체감형 서비스로 분류되며, 11대실천과제는 3개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

1.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2.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품질 데이터 확보
3.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지원 구매
4.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5.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6.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7. 새로운 데이터 활용 제도 조기 정착
8. 데이터 생태계 전반 위험 선제 대응
9.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구축
10.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11.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상기 11개의 과제는 아래와 같이 3개의 구분으로 분류된다.

1.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1번~4번)
2. 종합적 데이터 정책 체계 확립(5번~9번)
3. 특별 현안 과제(10번~11번)

이 중 5.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의 세부 내용은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CDO) 신설이다.

CDO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비롯한 국가 차원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전반 전략과 구현 책임을 지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이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지방직은 3급 국장 이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정부 모든 공공기관에도 고위직 CDO가 설치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4차위가 '국가 CDO'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CDO를 중심으로 데이터 중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존 업무 체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국민에게 단 한 번만 질문하고 정보를 받으면 더 이상 같은 질문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정부 데이터 수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전 기획을 강화한다.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인 재난 지원 행정체계 수립한다.

데이터에 친화적인 정부 체계로 전면 개편, 민간의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기 11대 실천과제는 동 프로젝트 내 9대 서비스와 달리 중-장기 과제의 비중이 높으며,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범부처 차원의 통합 및 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특위 핵심과제이다.